

# 자치단체장 인사전횡 방지 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공정성 제고방안 세 번째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O)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채용과 승진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위법한 인사행위가 있으면 승진을 취소토록 하는 등의 권고방안이 자치단체장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번에 추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 번째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고한 세부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특별채용** = 자치단체장의 측근인사나 가족, 친·인척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자격 기준이 자의적으로 정해지거나, 학연·지연 등이 배제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미비해 불공정한 특별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 00시는 지난 2009년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A대학 교수가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 본인의 제자를 면접해 최종 합격처리했었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험위원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 사제 관계 등이 있으면 제척·회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승진심사** = 지방공무원의 승진은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만, 자치단체장이 사전에 개입해 근

무성적 평정이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작해 자신의 측근인사 등을 승진대상자에 끼어 넣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실제로 서울시 00구는 구청장이 자신의 비서실장 등 6급 5명을 승진대상자로 사전에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쳐 5급으로 임용했다. 또 최근 3년간 서울시 00구는 5급 승진심사 6회 동안 승진후보자 1순위 제외회수가 5회에 달하고, 경남 00시는 5급 승진심사 7회 동안 1순위자 제외회수가 5회에 이르는 등 자치단체장 성향에 따라 승진이 좌우되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진심사 대상명단, 심사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사후에 공개토록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자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면 그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현행 5명 이내 기준 4배수 → 2~3배수로 조정)을 강구하도록 했다.

**인사위원회**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대부분 내부위원이며, 인사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사전에 막지 못해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 00시는 지난 2009년, 8~9월 5급 승진 심사시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자를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임용권자에게 심의·의결권을 부당하게 위임해 승진임용했다. 또 충북 00군은 담당자가 외부위원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서면심 의 때는 도장으로 날인하는 등 부

적절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했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내·외부 위원이 교차해 호선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심의 자료를 외부위원에게 제공해 실질적으로 심의에 참여토록 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풀(Pool)제를 도입하고 서면심의를 원칙적 금지하는 법안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정조치** =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이나 뇌물제공 등 위법행위로 승진하더라도 원래 직급으로 강등되지 않고 온정적인 처벌로 승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경기도 00시는 인사담당자가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등 승진명부순위를 조작해 2007년 3월 승진 임용된 사실이 추후 적발되었으나 2008 12월 정직 처분만 받고 승진 직급을 유지시켰다.

광주시 00구는 2010년 2월, 4급 승진사례금으로 2천만원을 준 공무원을 강등하지 않고 같은 해 8월 정직 처분만 받고 승진 직급을 유지시켰다. 서울시 00구는 2008년 2월 5급 승진인사와 관련해 3천만을 준 공무원이 강등되지 않고 2009년 7월 정직 처분만 받고 승진 직급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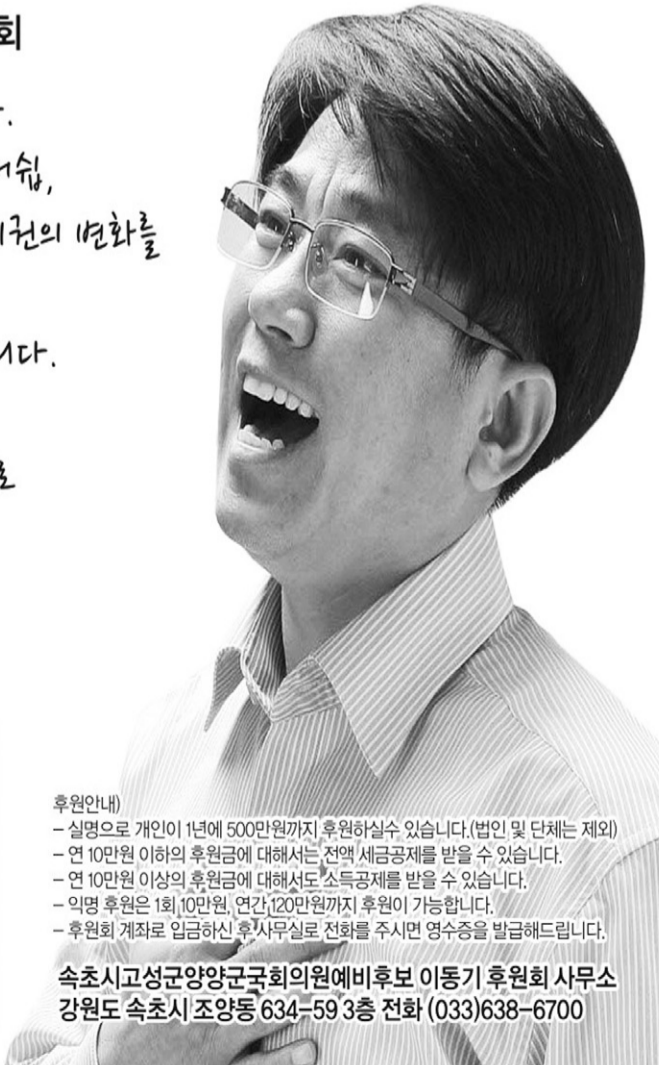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위법한 인사행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인사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이 강화되어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 젊은 대표 이동기! 밝은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예비후보자 이동기 후원회

작금의 시대는 변화의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대처할 풍부한 상상력으로 도전하는 리더십,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넓고 구태한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탈권위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책임자가 바로 이동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국정참여와 고향사랑의 정치활동으로 지역 대표 정치인으로 성장한 이동기, 이제 설악권을 위해 무릎을 꿇고 가슴과 열정으로 이동기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 배워온 길

- 영랑초등학교 졸업
- 설악중학교 졸업
- 설악고등학교 졸업
- 동우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정치학 석사) 졸업

#### 걸어온 길

- 민주통합당 소속 고성 양양 지역위원장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원담당 행정관
- 제17, 18대 국회의원 출마
- 열린우리당 설악권 개발 특별위원장
- 이광재, 최문순 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영동본부장

#### 후원안내

- 실명으로 개인이 1년에 500만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법인 및 단체는 제외)
- 연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10만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익명 후원은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합니다.
-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신 후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속초시고성군양양군국회의원예비후보 이동기 후원회 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634-59 3층 전화 (033)638-6700

#### 이동기 후원회 후원계좌

농협 302-0483-947501(예금주 김영선) 후원회장 김황현 현진닷컴(주) 대표이사



\*이 신문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광고 · 구독 문의  
TEL. 681-1666~7